



보도 일시	2022. 2. 18.(금) 08:30	배포 일시	2022. 2. 18.(금) 08:3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역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8(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 ② 석유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산업부, 제목만 공개)
- ③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 제목만 공개)
- ④ 보건복지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¹⁾ (복지부, 제목만 공개)
- ⑤ 국토교통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총괄>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형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khnam@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선우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김준결 (bluepine31@kore.kr)
<공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iihyun77@korea.kr)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권혁우 (044-203-5750)
		담당자	사무관	정다연 (diana816@korea.kr)
<공동>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임대식 (044-202-2310)
		담당자	서기관	양명철 (di daod19@korea.kr)
<공동>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201)
		담당자	사무관	서혜린 (aroundawn@korea.kr)

1) 4,5번 안전은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를 거쳐 복지부·국토부가 소관분야 대응방안을 마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상정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지금 전세계는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이 증첩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14.10월 이후 최고수준(2.15일 \$93.1/B, 두바이유)을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분야부터 중간재·내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주요국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지원책 등으로 자동차 등 내구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 생산차질 및 해상물류 지체 등이 증첩되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가 분출된 것도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가속화된 주요국의 물가상승세가 올해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월 소비자물가가 7.5% 상승하면서 '82년 2월 이후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로존은 1월 5.1% (HICP²⁾기준) 상승하며
'9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영국 1월 소비자물가도 5.5% 상승하여
약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낮은 편이나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흐름을 보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0.1%p 축소되어
물가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³⁾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 ①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② 「석유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 ③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④ 「보건복지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⑤ 「국토교통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경제팀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2)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지수 측정방법을 따른 합성소비자물가지수로 유로존 내
국가 간 물가수준 비교에 활용

3)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11) 3.8 → ('21.12) 3.7 → ('22.1) 3.6

【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첫 번째 안건은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흐름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명절수요 등 상방압력이 존재하였으나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역대 최고 수준(20.4만톤)의 성수품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업체할인 병행 등으로

설이 있었음에도 축산물 물가가 전월대비 △1.6% 하락하는 등

1월 전월비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⁴⁾되어

12월보다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축소(7.8→6.3%)되었습니다.

아직 2월이 열흘정도 남아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약 2/3가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품목 가격을 점검한 결과

쌀·사과·딸기 등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1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고,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계란 가격도 6천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산물도 안정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마늘·시금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높고,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류, 가공식품 등 타 분야의 상방압력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물 안정세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 해수부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설 이후에도 지속 운영하여 물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추진하겠습니다.

4) '22.1월 농축수산물 전월비 1.8% (과거 5·10년 평균 2.4~2.5%)

농산물은 한파 등으로 가격불안 발생시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하여 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쌀은 업제와 연계한 할인행사도 2월말까지 연장하여
소비자가격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도축장 방역을 강화하고,
호주 등 주요 수입국 공급망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필요시 대체 수입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 여주(해밀)에 이어
2월 중 포천(축협)에 두 번째 공판장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안정적인 가격세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2월(2.10~23일)에도 할인 행사를 통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 이후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설 명절기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업제 자체할인을
2월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식유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

두 번째 안건은 식유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2월 식유류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관제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세 번째 안건은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는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12월(3.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동월비 4.2% 상승하며
‘14.8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1월 외식 물가도 원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더해지며
12월(4.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동월비 5.5% 상승하며
'09.2월(5.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2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명절전 할인행사 종료 등으로
최근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물가안정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기재부·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체 간담회 등
업체 소통을 강화하여
가격 인상 자제 및 시기분산 등을 지속 요청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업체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울관세할당⁵⁾(TRQ)을 적용하고,
식품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확대와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기한
연장(~'23년말) 등을 통해 업체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포장재 관련 식품표시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업체의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관련규제 개선, 포장재 변경주기 통일 등
그간 업체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도
관계부처와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TRQ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울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콩의 경우 기본 관세는 487%이나 TRQ물량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

아울러 2.23일부터 매주 총 12개⁶⁾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aT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배달플랫폼별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감시하고, 혐의 확인시
어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의 이유로
제조·유통업체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350억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공정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분야·국토교통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네 번째 안전과 다섯 번째 안전은
보건복지분야·국토교통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⁷⁾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물가 부처책임제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 정책대응능력을 총동원하여
물가인상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 죽·김밥·햄버거·치킨(4대 관리품목) +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
설렁탕 등 총 12개 품목

7)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를 거쳐 복지부·국토부가 소관분야 대응방안을 마련

오늘은 의료서비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보건복지분야와
철도요금, 도로통행료, 공동주택관리비 등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복지부와 국토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전체 진료비의 85%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계부담을 지속 낮춰오고 있으나⁸⁾,
나머지 15%를 차지하는 비급여는
다수 품목 가격이 상승⁹⁾하였습니다.

정부는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¹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통해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¹¹⁾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 등을 통해
가격비교 가능성을 높여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등
정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8) '17.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을 통해 '18~'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 수혜

9) '21년 조사결과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 419개 중 283개 항목 평균가격 인상, 135개
항목의 평균가격은 인하

10) (가격고지제도)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시설 내부에 비급여 내역 전체 가격 표기
(가격공개제도) 모든 의료기관, 616개 비급여 항목('21)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공개
(사전설명제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 설명

11) (금융지원) 지역신보 보증료 감면(0.2%p),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감면(0.5%p)
(홍보강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국토부가 담당하는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구노력 등을 통해 동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비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87%)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상승¹²⁾한 측면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r)을 통해
관리비 동향 모니터링 및 부과·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상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대상 확대¹³⁾를 검토하고,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 부처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신설시
관리비 전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2월 물가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제심을 가지고 2월 남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 '21년 물가상승률(% , 전년비): (공동주택관리비) 5.3 (CPI) 2.5

13) 현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주택까지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